

투표용지 부족 논란 국정조사 본격화... 여야 협상 줄다리기

필요성엔 동의, 범위·방식 입장 차
민주, 다음주 국조계획서 채택 추진
국힘, 야당이 위원장 맡는 특별요구



김승묵 국회의사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조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협상에 난항을 빚을 전망이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유상범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한병도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의 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여야는 조사계획서 성안을 위한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사 범위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본회의에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에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성식 국회의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가 조사계획서를 완성하면 국회의장은 양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한-EU 정상, 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정상회담 갖고 공동성명 채택
北 비핵화·우크라이나 평화 협력 강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 및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이사회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한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개발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대통령과 EU 정상은 "우리는 막대한

인도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핵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한-EU 정상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은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의정서를 발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

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도 포함됐다. 이들은 "남북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및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동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임을 인식하며, 북한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공동성명 관련 해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정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



G7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유럽 연합(EU)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한-EU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우리 양측은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EU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을 개시하고 디지털통상협정과 승객 예약 자료 전송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여야 모두 지도부 책임론 분출... 사퇴 요구 잇따라

대표 거취 문제, 당내 주요 현안
전대·당 재정비 과정 '핵심 변수'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모두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을 도전하려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주장하고 있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10시부터 90여분간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서울시장 등 일부 지역 패배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또 연임을 도전하려면 정 대표가 당 대표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철민 의원은 서울시장 석패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는데 당 차원 전략, 더 많은 자원 투입, 우리 스스로 각성 등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모두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정 대표가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의 신뢰를 어떤 식으로 더 갖춰 나갈지 고민과 조치들, 그것에 맞는 행동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당위원장이자 이번 대구시장 선거를 도운 임미애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경북 유세 덕분에 기초의원 선거에서 패 많은 선전을 이뤘다"고 감사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국 선거를 지휘하면서 갈등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정 대표가 빠르게 사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별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에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

금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해야 하겠다 다짐과 결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정점식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설전이 벌어진 데 이어, 소장파 의원들도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 면전에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를 하셔서 평가를 받으셔야 한다. 그래야 불만이 있는 당원들도 승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 돼서 갈 수 있다"면서 "우리 모두 사퇴하는 것을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서 고성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소장파 의원인 '대안과미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 참패에 책임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주장, 당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 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장 대표의 '전국 재선거'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표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장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행위는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장 대표 거취, 참정권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담아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다시 세울지 지켜보고 있다"며 "정점식 원내대표께 촉구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예진 기자